

새정치, 총선 공천 '신인 가산점' 도입 추진

혁신위, '선호투표제·결선투표제' 도입도 고심

10일께 공천률 최종안 마련...계파 이해관계 속 진통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에서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신인 가산점' 제도를 신설하는 동시에 선호투표제 또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당 혁신위원회가 선출직공직자 평가 단계에서 1차로 20%를 교체하기로 한 가운데 나온 방침이어서 대대적인 추가 현역 물갈이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같은 방안은 현역 의원을 평가해서 부정적으로 물갈이를 시도하기보다 신인에게 기회를 문을 더 넓히는 긍정적 방식의 인물교체라는 점에서 당내에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혁신위는 이러한 골격의 공천 혁신안을 놓고 전날 최고위원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내부 의견 수렴 및 논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31일 알려졌다.

혁신위는 지난 28일 의원 워크숍에서도 ▲신인가산점 ▲단수공천 제한 ▲선호투표제 ▲결선투표제 ▲공천관리위원회의의 후보 압축 최소화 등의 제도들을 대상으로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핵심 관계자는 "정치신인이 최대한 많이 진입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신인 가산점 부여"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투표 방식을 선호투표제로 할지 결선투표제로 할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당헌·당규에는 여성·청년에 대한 가산점 규정만 있을 뿐 신인에 대한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다.

선호투표제란 선거인단이 출마한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1순위부터 가장 후순위까지 순서대로 다 적은 뒤 1순위 표를 기준으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소득표 후보자의 2순위 지지표를 나머지 후보자들의 득표수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반이 나올 때까지 하위 득표자들을 제외해가는 방식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7·30 재보선 당시 이 방식을 적용한

바 있다. 결선투표제란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를 상대로 결선을 하는 것이다. 때문에 선호투표제의 경우 여전히 현역 의원이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구조여서 신인에게 가산점을 주더라도 현역 교체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선호투표제보다는 현역 교체 효과가 큰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신인가산점-결선투표제'(인센티브 플레이오프)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어느 수준까지를 신인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놓고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비현역 정치신인에게 구체적 범주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 부여하되 현역의원만큼이나 인지도가 높은 전직 의원이나 구청장 등은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 혁신위는 오는 10일께 공천률을 최종 마련, 16일 중앙위 통과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지역별, 계파별 엇갈리는 이해관계 속에 진통이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난 31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3천억 임당원서'에서 인태연 '전국 을살리기 운동본부' 상임대표(오른쪽 세 번째) 등 임당자들이 문재인 대표에게 임당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승용 최고위원, 복귀 1주일만에 쓴소리

"무능한 野 이대론 내년 총선 어렵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이 지난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박근혜정부와 여당이 무능하다고 비판하면서, 야당도 무능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다"고 당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24일 복귀한 이후 1주일 만에 더욱 열심히 하자는 취지에서 쓴소리를 한 것이다. 주 최고위원은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지금까지처럼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다시 치솟고 여야의 정당지지도가 더블스코어 차이를 유지한다면 우리 당의 내년 총선 전망은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를 통



해 국민들로부터 새 정치연합이 달라졌다. 제1야당의 면모를 갖춰서 정권을 맡겨도 좋겠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경야독을 하듯이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주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부터 심기일전해서 정기국회를 통해 제1야당이 무기력하지 않다는 것을 실력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주경야독을 하듯이 낮아지는 국회에서 일하고 밤에는 혁신을 위해 일하는 '주국야력'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김무성-문재인, 노동개혁 놓고 '장외설전'

박근혜 정부의 올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방향성과 실행 방식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31일 치열한 '장외 설전'을 벌였다. 양당 대표는 이날 국가미래연구원에서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특별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해 각각 축사를 통해 최근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놓고 극명한 인식 차를 드러냈다. 이로써 올 정기국회에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토론회에서 통상임금 범위 등을 둘러싼 논란 등을 언급한 뒤 "기성

세대가 만들어 놓은 불합리한 노동시장의 제도·관행으로 인해 우리 아들·딸과 장년 근로자, 비정규직, 하청 근로자들이 겪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뒤이어 연단에 오른 문 대표는 재벌개혁과 함께 노사정위가 아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개혁을 주장, 김 대표와 대비를 이뤘다. 문 대표는 "재벌과 대기업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 710조원의 어마어마한 사내유보금을 쌓고 있는 재벌·대기업은 이 돈을 청년일자리와 중소기업 상생에 쓸 수 있다"면서 "사용자측과 정부도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하고,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비례대표 유지냐 축소냐... '빈손' 정개특위 결국 연장전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기준을 논의하던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난 31일 결국 사실상 '빈손'으로 활동을 마치게 됐다. 정개특위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해산 위기는 겨우 면했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선거구 획정기준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양상이어서 정개특위 차원에서 진전된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이처럼 국회의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이 8월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

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회제출 법정시한(10월13일) 안에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현,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오후 회동을 하고 최대 쟁점인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비율 문제에 대한 이견 조율이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애초 이날 잡혀 있던 정개특위 선거법 심사소위 개최도 무산됐다. 여야는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한다는 대원칙에만 의견을 같이할 뿐 지역구와 비례

대표 의원 비율 등 모든 쟁점에 있어서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 246명인 지역구 의원 수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지역구가 늘어난 만큼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이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수는 최소한 유지돼야 하며 축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게다가 여야를 불문하고 놓여온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선거구획정 기준에 놓여온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상황이 더 꼬여만 가는 형국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에 따라 결국 여야 대표가 나서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근 "결국 당 지도부들이 만나서 일괄 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김 대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애초 본회의에서 의결된 정개특위의 활동기한이 이날로 끝났지만 정개특위는 당분간 명맥은 유지하게 됐다. 현행 국회법 44조 3항에 따르면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종료 시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지구 심사를 의뢰해 법안이 심의 중인 경우,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특위를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예산안·특수활동비 곳곳 '뇌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도 '암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1월 10일 일정으로 시작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2016 회계연도 예산안뿐 아니라 노동개혁을 포함한 각종 법률안을 다룰 예정이어서 여야 간 치열한 백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국정감사 대상기간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한다. 이어 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3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시행함으로써 이번 국회의 개막을 알린다. 올해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를 사이에 두고 9월10~23일, 10월1~8일로 분리

해 실시한다. 국정감사 직후 13~16일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뉘어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책을 점검한다. 해마다 여야 공방 속에 막판까지 물러던 예산안은 예산안 자동 상정과 통과를 담은 개정 국회법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통과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쟁점으로 떠오른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의 특수활동비 심의 강화 방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충돌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 역시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천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로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과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철입회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